



의안번호	제 2009 - 7 호
의 결 연 월 일	2009. 2. 19. (제15차 회의)

보 고 안 건

운영지원단 업무보고

제 출 자	운영지원단장
-------	--------

목 차

I.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2차 공청회 결과 보고	1
1. 공청회 개요	1
2. 발표 내용	1
3. 주요 쟁점	2
4. 토론 요지	5
II.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결과 보고	8
1. 개요	8
2. 주요 쟁점	9
III. 전문위원 업무 지원	13

I.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2차 공청회 결과 보고

1. 공청회 개요

- 일시 : 2009. 02. 06.(금) 14:00~18:40
- 장소 : 서울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(서관 417호)
- 참석자 : 총 160명
 - 양형위원회 위원장
 - 양형위원회 위원 : 성낙송(상임위원), 길태기, 남인순, 서기석, 신용진, 조건호, 하태훈, 한인섭 위원
 - 전문위원 : 김소영, 김현석, 박형관, 서보학, 손철우, 이주형, 이천현, 이호중
 - 판사 20명, 검사 18명, 변호사 15명
 - 법무부, 국방부, 한국형사정책연구원,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 등

2. 발표 내용

제 목	발표자/토론자/답변자	
● 강도 / 횡령·배임 / 위증·무고 양형기준안 종합발표	김소영 수석전문위원	
● 강도범죄 양형기준안 지정토론	지정토론	손동권, 이상훈
	답변	서보학
● 횡령·배임범죄 양형기준안 지정토론	지정토론	이광수, 정미화
	답변	김현석, 이주형
● 위증·무고범죄 양형기준안 지정토론	지정토론	김영중, 임복규
	답변	김소영, 이천현

3. 주요 토론 쟁점

가. 강도범죄 양형기준안

(1) 이미 심도 있게 논의된 부분

- 범죄별 유형분류 기준의 통일성 확보 필요
- 형량범위 설정 원칙의 적정성 여부(법정형 하한과의 관계)
- 모든 법률상 가중/감경 요소의 양형인자 반영 필요
- 일반양형인자인 범행동기(생계형 범죄, 비난 동기)를 특별양형인자로 변경
-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, ‘흉기에 의한 상해 발생’을 가중인자로 추가
- 유형분류에 사용된 ‘흉기’를 양형인자로 다시 고려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 부여(이중평가금지 취지 반영)

(2)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

-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, ‘특수강도인 점’을 양형인자로 추가
- ‘상당한 피해액’을 집행유예 주요 부정사유로 추가

나. 횡령·배임범죄 양형기준안

(1) 이미 심도 있게 논의된 부분

- 유형분류의 세분화 필요
- 기업범죄에 대한 별도 기준 설정 필요
- 업무상 횡령·배임의 기본유형 처리의 적정성 여부
- 횡령범행의 가중인자 처리의 적정성 여부
- 형량범위 규범적 상향조정의 근거 확보 필요
- 형량범위의 중첩과 폭의 적정성 여부

- 특별인자/일반인자 구분의 적정성 여부
- 양형인자의 구체화 필요
 - ☞ 지적사항을 토대로 양형기준 매뉴얼 작업을 통해 보다 구체화할 예정
- 복수 양형인자, 집행유예 참작사유 평가원칙의 적정성 여부

(2)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

- 감경인자 추가
 - 사실 또는 법률의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는 않지만, 행위자에 대한 비난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
 - 범죄성립 여부에 관하여 학설·판례가 나뉘는 경우(예: 명의신탁 유형)

● 감경인자 축소

[특별감경인자]

-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 회사, 오로지 피해 회사의 이익 목적, 손해발생 위험의 미현실화 ⇒ 삭제(기업범죄자에 대한 특혜)
- 피해자 처벌불원, 상당부분 피해회복 ⇒ 통합하여 일반감경인자로 변경(중복 평가)

[일반감경인자]

- 범죄수익의 미소비·미보유 ⇒ 삭제(우연한 사정)
-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비율이 높은 경우 ⇒ 삭제(기업범죄자에 대한 특혜)
- 사회발전 기여 ⇒ 삭제(부적절)

● 집행유예 참작사유 축소

- 임무위반의 정도 경미, 소극적 범행 가담 ⇒ 삭제(재범위험성과 무관)

- 양형인자 부분에서 삭제·통합을 주장한 사유 ⇒ 삭제·통합(위에서 언급한 사유와 동일)
- 약물중독, 알코올 중독 ⇒ 삭제(부적절)
- 피해자의 엄벌 탄원 ⇒ 삭제(부적절)

다. 위증·무고범죄 양형기준안

(1) 이미 심도 있게 논의된 부분

- 위증 대상 사건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유형분류 시도 필요
- 경험적 접근방식의 문제점
- 형량범위의 기준점 내지 출발점 설정 필요
- 형량범위의 중첩과 폭의 적정성 여부
- 규범적 상향조정의 근거 확보 필요
- 행위인자/행위자인자 구분의 문제점
- 양형인자의 구체화 필요
 - ☞ 지적사항을 토대로 양형기준 매뉴얼 작업을 통해 보다 구체화할 예정
- 복수 양형인자, 집행유예 참작사유 평가원칙의 적정성 여부

(2)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

- [위증죄] ‘피고인 또는 친족의 이해관계로 인한 경우(범행동기)’를 감경인자로 추가
- [무고죄] ‘피무고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경우’ 또는 ‘피무고자에 대한 민·형사상 책임을 면하려고 무고한 경우’를 가중인자로 추가

4. 토론 요지

가. 강도범죄 양형기준안

(1) 유형분류

- 강도범죄는 범행동기에 따라 사회적 평가가 달라지는 측면이 있어 비계량적 요소가 중요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미국식 격자형 모델보다 기준안의 유형분류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 제시

(2) 형량범위

- 강도범죄는 형량의 적정성에 대한 비판이 크지 않아 경험적 접근방식이 중시되어야 하므로 기준안의 형량범위는 적절하다는 의견 제시

(3) 양형인자

- 행위자적 요소보다 범죄행위 자체에 관련된 요소를 중하게 고려하도록 한 평가원칙은 범행비례적 양형론의 관점에서 매우 타당하다는 의견 제시
- 범행동기와 행위태양에 관련된 양형인자의 비중을 보다 높여야 한다고 지적
 - ☞ 기준안에서도 범행동기와 행위태양을 반영할 양형인자를 추출하여 그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특별/일반인자로 선정하였다고 답변
- 이중평가금지의 취지에 비추어, 유형분류의 기준으로 고려된 ‘흉기’를 양형인자로 다시 선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
 - ☞ 특별/일반인자 선정의 일반원칙에 따라 질적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고, 일률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

(4) 집행유예 기준

- 형량 기준과 달리, 집행유예 기준에서 재범 위험성이라는 ‘예방적 요

소'를 분류 원칙으로 삼은 것은 적절하다는 의견 제시

- 단순강도에 적용될 주요 부정사유가 주요 긍정사유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

☞ 집행유예 참작사유는 경험적 및 규범적 추출원칙에 따라 선정하였으며, 추후 적정성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답변

- '피해액이 상당한 경우'를 주요 부정사유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

☞ 위원회 논의과정에서, 재산강취의 태양이 매우 다양하여 피해액의 반영이 쉽지 않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배제되었다고 답변

나. 횡령·배임범죄 양형기준안

(1) 유형분류

- 기준안의 전체적 구조에는 동의하나, 유형구간의 기준이 되는 이득액의 범위를 다소 좁혀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

☞ 위원회 논의과정에서, 금액만에 의해 유형을 지나치게 세분화할 경우 적정한 양형 도출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기준안과 같이 유형분류하였다고 답변

- 기업범죄에 대한 별도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

☞ 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기 위원회에서는 기업 횡령·배임에 대한 별도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답변

(2) 형량범위

- 합리적 근거 없이 규범적 상향조정을 실시할 경우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 제시

- 형량범위의 폭이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

(3) 양형인자

- 양형인자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
 - ☞ 양형인자의 정의는 양형기준 매뉴얼 작업을 통해 보다 객관화할 예정이며, 향후 판례 축적을 통해 그 의미가 보다 명확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
- 기업범죄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되거나 중복 적용될 우려가 있는 양형인자를 삭제하거나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
 - ☞ 횡령·배임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각의 근거에 따라 별개의 사유에 기초하여 엄정한 양형인자이며, 다만 지적 사항을 참고하여 추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변

(4) 집행유예 기준

- 주요 참작사유와 일반 참작사유가 혼재된 경우의 평가원칙이 미흡하다는 지적
- 과거 기업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허용의 근거로 실시되던 사정이 그대로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채택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
 - ☞ 횡령·배임범죄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양형기준의 통일성을 추구하고자 집행유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참작사유를 추출한 상태이며, 다만 지적 사항을 참고하여 추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변

다. 위증·무고범죄 양형기준안

(1) 유형분류

- 위증·무고범죄의 유형분류가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 제시
- 위증 대상 사건의 내용을 유형분류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
 - ☞ 다양한 사건 형태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만한 기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

(2) 형량범위

- 형량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출발점이 제시되지 않아 양형기준의 예

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

- ☞ 위원회는,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범죄유형별로 기본범죄수준을 설정하는 방식 대신 현재의 기준안 방식(범죄유형 분류 +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)을 채택하였다고 답변

(3) 양형인자

- 위증죄에 관하여, ‘피고인 또는 친족과의 이해관계 유무’를 양형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
 - ☞ ‘경제적 대가 수수’ 등이 이미 양형인자로 선정되어 있는 이상, 위 사유만으로 행위책임을 가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
- 무고죄에 관하여, ‘피무고자에 대한 실체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’를 양형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
 - ☞ 피무고자에 대한 부정적 이해관계는 무고죄에 기본적으로 수반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, 위 인자를 추가할 경우 양형심리가 민사적 실체관계의 존부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답변

(4) 집행유예 기준

- 무고범죄에 적용될 주요 부정사유가 주요 긍정사유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
 - ☞ 집행유예 참작사유는 경험적 및 규범적 추출원칙에 따라 선정하였으며, 추후 적정성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답변

II.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결과 보고

1. 개요

- 살인/뇌물/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양형위원회 규칙 제11조에 따라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·공공기관·연구기관·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

견조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

● 조회 내역

- 대상 기준안 : 제1차 공청회 개최결과와 전문위원단 검토내용을 토대로 양형위원회 제13차 회의(2008. 12. 23.)에서 수정 심의를 마친 살인, 뇌물, 성범죄에 관한 양형 기준안
- 회신 기관 : 국방부, 대검찰청, 대법원, 대한법무사협회, 보건복지가족부, 참여연대, 한국가정법률상담소, 한국교정학회, 한국성폭력상담소, 한국형사정책연구원
- 조회 기간 : 2009. 1. ~ 2.

2. 주요 쟁점

가. 살인범죄 양형기준안

(1) 이미 심도 있게 논의된 부분

- 계획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유형분류 시도 필요
- 형량범위의 중첩과 폭의 적정성 여부
- 형량범위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문제점
- 특별인자/일반인자 구분의 적정성 여부
- ‘존속’을 특별가중인자에서 제외
- ‘농아자’를 양형인자에서 제외
- 살인기수범의 경우, ‘유족 처벌불원’을 행위인자와 동등 처리하는 원칙 배제
- 범죄전력에 대한 특별 고려 필요
- 양형인자의 구체화 필요
- 복수 양형인자, 집행유예 참작사유 평가원칙의 적정성 여부

(2)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

- 유형분류의 적정성 여부
 - ‘극심한 생활고로 인한 살인’을 제1유형 정의에서 제외
 - ‘정신질환으로 인한 살인’의 해당 유형 결정 필요
- ‘형사처벌 전력 없음’을 감경인자로 추가
- ‘피해자와의 인적 관계’를 가중인자로 추가
- ‘범행 후 증거인멸 시도’를 가중인자로 추가
- 집행유예 일반 참작사유인 ‘중지미수’를 주요 참작사유로 변경
- 집행유예 일반 참작사유인 ‘범행 후 구호후송’을 주요 참작사유로 변경

나. 뇌물범죄 양형기준안

(1) 이미 심도 있게 논의된 부분

- 뇌물수수액을 기준으로 한 유형분류의 적정성 여부
- 살인죄 등과 비교하여, 형량범위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문제점
- ‘농아자’, ‘심신미약’을 양형인자에서 제외
- ‘공무·국가적 피해 정도’를 양형인자로 반영
- ‘형사처벌 전력 없음’을 감경인자, 집행유예 긍정사유에서 제외
- ‘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 수수’를 ‘관행상 수수’로 변경
- ‘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’를 ‘실질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’로 확대
- 특별감경인자인 ‘수사개시 전 뇌물반환’을 양형인자에서 제외하거나, 일반감경인자로 변경
- ‘3급 이상 고위 공무원’을 양형인자에서 제외
- ‘뇌물의 사용용도’를 양형인자로 반영

- 뇌물수수에서는 ‘누범’이, 뇌물공여에서는 ‘동종누범’이 각 특별가중인자로 선정 ⇒ 일관성 확보 필요
- ‘수사개시 후 뇌물반환’을 일반감경인자로 추가
-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 ‘장기간 근무’, ‘피고인 중병’, ‘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수반’을 제외
- ‘소극가담’을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 제한

(2)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

- 공범 사이에 범죄성립된 수뢰액과 실제 이득액이 다른 경우의 처리방식 결정 필요
- 뇌물수수에 있어, ‘뇌물공여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’를 감경인자로 추가
- ‘범행은폐 시도’를 가중인자로 추가
 - 예 : 발각에 대비하여 미리 차용증을 작성해 둔 경우
- ‘뇌물의 종류(현금, 향응 등)’를 양형인자로 반영
- ‘뇌물수수의 태양(타인 계좌 이용, 자금세탁 등)’을 가중인자로 추가
- 특별감경인자인 ‘내부비리 고발’을 수사개시 전후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반영
- 뇌물수수에서도 ‘뇌물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’를 집행유예 주요 부정사유로 추가
- ‘수사개시 전 자수’를 별도의 집행유예 주요 긍정사유로 추가

다. 성범죄 양형기준안

(1) 이미 심도 있게 논의된 부분

- 청소년, 장애인, 친족관계 범행에 대한 별도 유형 구분 필요

- 형량범위의 중첩과 폭의 적정성 여부
- 형량범위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문제점
- 전체적인 감경인자와 가중인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감경인자 추가 발굴 필요
- ‘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경우’를 양형인자로 추가
- ‘상해가 경미한 경우’를 양형인자에서 제외
-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, ‘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’를 양형인자에서 제외
- ‘위계·위력에 의한 범행’을 감경인자에서 제외
- ‘형사처벌 전력 없음’, ‘농아자’를 양형인자에서 제외
- ‘음주’를 고려해서는 안되는 인자로 명시 필요
- 청소년, 친족관계 성범죄에서 ‘합의’를 양형인자에서 제외
- ‘합의시도 중 피해야기’를 양형인자에서 제외
- ‘상당금액 공탁’을 진지한 반성에 포함
- ‘극도의 성적수치심 증대’를 세분화할 필요
- 일반가중인자인 ‘인적 신뢰관계 이용’을 특별가중인자로 승격
- ‘피해의 장기간 지속’, ‘다수 피해자 존재’, ‘약취·감금이 수반된 경우’, ‘추가적 피해(이사, 전학, 실직) 발생’ 등을 양형인자로 추가
- 양형인자의 구체화 필요

(2)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

- ‘처녀막 파열’을 중한 상해결과 발생의 예로 포섭
- ‘소아기호증에 의한 경우’를 가중인자에서 제외
 - 치료의 대상으로, 책임을 가중하는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

-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, ‘유족 처벌불원’의 인자 정의에서 ‘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금액 공탁’을 제외

※ 집행유예 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

- 친족관계 성범죄에서, ‘과거 부양 또는 향후 부양 예정’을 긍정적 참작사유에서 제외하거나, 부정적 참작사유로 선정
- 고려하지 말아야 할 요소
 - 신분상실 또는 명예실추
 - 본건 관련 징계처분
 - 청소년, 친족,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‘합의’

III. 전문위원 업무 지원

- 운영지원단(기획운영과)은 전문위원 전체회의 및 팀별 회의의 회의 자료를 준비하는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
- 전문위원 회의 현황

회의명		일 시	안 건
전문위원 전체회의	제15차	2009. 2. 13. 14:00	○ 살인범죄 경합범 기준 ○ 뇌물죄 경합범 기준 ○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 / 경합범 기준
1팀 회의	제22차	2009. 2. 12. 15:00	○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 / 경합범 기준
2팀 회의	제14차	2009. 2. 9. 14:00	○ 전문위원 2009년 연구계획(2팀) ○ 살인범죄 경합범 기준 ○ 뇌물범죄 경합범 기준